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1월 17일(월) 총 2매	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대변인실	담 당 자	• 언론행정팀장 유광호 ☎440-3051 • 담당자 김의호 ☎440-3055			
사 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미운영 인터넷신문 30곳 직권등록취소
-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 조성 -

인천광역시는 인터넷신문·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해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에 대해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·필요적 게재사항 게재·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진폐업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총 158곳에 대해 자진폐업 65곳,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다.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이번 직권등록취소는 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폐업을 하지 않은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조치로서,

등록취소예고, 청문,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직권등록취소를 완료했다.

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“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,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인천시는 향후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